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황도수 □정책위원장:박상인 □사무총장: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  withccej 후원 008-01-0567-507(국민)

-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백인길 운영위원장)
- 문의 : 도시개혁센터(김성달 국장, 윤은주 간사, 02-3673-2146/dongi78@ccej.or.kr)
- 시행 : 2020. 10. 22.(총 7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재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선언 및 서울시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10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2020년 10월5일 시민사회단체들의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다섯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오늘 우리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대한 우려들을 정리하여 다시 서울시에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10월5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의 빠른 답변을 촉구한다.

1.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00억원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하였다. 10년 만에 다시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당시에 도 서울시는 이 사업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재조성하려 한다. 서울시 스스로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실패를 인정한다면 당시 사업의 실패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만 앞으로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수 있다. 또 향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 시장+전문가’에 의해 광화문 일대가 파헤쳐지는 악순환도 방지할 수 있다.

<질문1>

10년 만에 다시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하겠다면 오세훈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실패한 것이다. 그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또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이번에 서울시는 그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한 뒤에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가?

II.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역시 도시,교통,역사,문화,조경 등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수없이 진행하였으며, 시민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현재의 중앙광장안을 결정하였다. 현재 서울시 역시 서측안으로 결정한 근거로 전문가 의견과 시민 선호도 조사를 고려한 결과라 주장하였는데, 시장에 따라 전문가 의견과 시민 선호도가 달라진다면 객관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기에 객관적인 여러 정황과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질문2>
서울시가 서쪽 편측안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현재의 서측안 제안자이자 서울시 초대 도시총괄건축가, 현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던 승효상 건축가 때문인가? 아니면 2016년부터 4년 동안 서울시에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어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고 박원순 시장의 남은 임기 안에 빨리 완공하기 위한 것인가? 새 시장이 취임하면 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전에 급히 완공하려는 것인가?

III.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9년 9월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전문가, 시민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특히 2020년 5월 23일엔 공관에서 시민단체들을 만나 “합의가 되지 않고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이 사업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고 박 시장은 공개적, 공식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 여부와 계획방향에 대해 결정한 바 없기 때문에 대행 체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

<질문3>
이 사업을 추진해온 고 박 시장이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서정협 시장 대행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은 타당한가? 서울시는 10월5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27일 회의에서 광화문광장 사업은 어떠한 흔들림없이 ‘현재 계획’에 따라 행정역량 집중하여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하였는데, 불과 4일 전에 고 박 시장이 이 사업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누가 이 ‘현재 계획’을 확정했다는 것이며, ‘현재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

IV.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예산 규모도 800억원으로 큰 편이고, 도시 공간과 교통에 주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지속해온 공론화 과정을 정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쟁점들을 정리하고 최종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과정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지난 9월28일 발표도 기자회견조차 열지 않고 몇 장의 보도자료로 갈음했다.

<질문4>
이렇게 성의없이 졸속으로 발표했어야 하는 일인가? 지금이라도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 또는 최소한 공개설명회라도 개최할 계획은 있는가?

V. 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 사업을 2020년 10월 착공해서 2021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 일대 주민에게는 2023년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사관 이전 이후 전면 보행 광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 9월28일 보도자료에서 광화문 일대 복원을 2021년 착공해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이후까지 수년 동안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질문5>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전면 보행 광장 사업 시기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광화문 월대 복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같은 시기에 추진하지 않고 시기를 나눠 짚끔 짚끔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과 시민들의 계속되는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광화문광장 사업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업인가?

VI. 2012년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블럭 10계명’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도 조성을 위하여 보도공사 실행명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동절기 보도블럭 공사 관행 근절 및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담당 부서인 보행정책과는 보도공사 ‘클로징11’의 이행 철저 및 예산집행 관련 협조 요청을 서울시 각 부서에 발송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절기 내 모든 보도공사 일절 금지 및 동절기 전 사전 행정지도’, ‘현재 진행 중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은 2020년 11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며, 예외적인 사항으로는 ‘긴급 굴착공사 및 소규모 굴착공사’에 한정하고 있다. 또 ‘공정상 공사완료 불가시 동절기 이후로 일정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보도공사 클로징11을 지켜져야 한다.

<질문6>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2020년 10월 말에 착공하여 2021년 2월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는데 80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보도공사 ‘클로징(Closing)11’을 위반하면 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결정은 누가 했으며, 보도공사 클로징11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보도공사 ‘클로징(Closing)11’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광화문 앞은 한양 천도 이후 600년 이상 서울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었다. 광화문 앞을 어떤 공간으로 만드느냐는 당대 시민과 정부의 정치 철학과 사회적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광화문광장을 조성한다면 앞으로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형태와 가치를 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는 이 같은 가치와 이상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완공한 지 10년 만에 재조성 논의에 휩싸인 오세훈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부디 서울시가 서두르지 말고 새 광화문광장을 21세기를 사는 시민들의 원대한 이상과 꿈을 담아 추진하기 바란다. 선출직 시장도 없는 상황에서 도둑질처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공사 일정을 당장 취소하고, 이 문제를 내년 4월 취임하는 다음 시장에게 넘기기 바란다. 그것이 시민과 역사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2020년 10월 2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사회각분야 전문가 성명서>

예산 낭비에 불과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획 및 10월 말 착공’이 절차적인 측면과 계획적인 측면 모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며, 사업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시민소통과정은 서울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10월말 시행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시민소통에 기반한 것이며, 61회 토론회 진행과 1만2천명의 시민참여를 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소통은 양적인 수치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광화문광장 논의과정에 대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은 2019년 12월 토론회와 2020년 2월11일 광화문시민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이 마지막이다. 2019년도에 진행한 공론화 과정들이 다시 쟁점별로 정리되어 논의가 열어야 했지만 이러한 과정은 전혀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소통 결과임을 주장하는 것은 그간 공론화 과정들이 서울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서울시가 2018년 4월부터 고집하고 있는 서측 광장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쪽으로 광장을 확대하는 ‘서측 광장안’에 대해 시민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주변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2009년 오세훈시장 재임 시기에 광화문광장을 중앙에 설치한 근거 역시 전문가 의견 및 주변과 연계성, 시민설문조사 결과였다.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뢰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설문조사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이 시도된 이후에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서측광장의 문제점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집중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단체들은 세종문화회관쪽보다 교보문고쪽의 보행자 숫자가 2배나 높으며, 특히 교보문고와 한국통신(KT),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의정부터 등 다양한 시민 이용 시설이 있음에도 현재 보행환경이 매우 나쁨으로 동측/서측 광장구조를 결정하기 이전에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현 광화문광장 계획은 서울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우 미흡하다.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물리적 구조 재편 이전에 대중교통중심체계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지원정책들이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녹색교통 진흥구역 정책과 연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며 매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결국 세종문화회관쪽으로 광장을 확대하는 계획에만 매몰되면서 통과차량 억제, 대중교통 활성화,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교보문고 방면 보행공간 확대,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고려 등이 부재한 상태에서 초기 계획안이었던 6차로를 7~9차로로 확장하겠다는 모순에 빠져버렸다.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선수를 늘렸다는 서울시의

변명은 공색하기만 하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서울의 미래가치 창출의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녹색교통진흥구역 사업을 넘어서는 정책들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4.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전격적인 공사일정 발표는 시장 대행체제의 권한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고 박원순시장의 역점사업이었으나 최종 계획안과 착공계획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 박원순시장은 세상을 떠났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 5월27일 사업관련 회의를 통해 어떠한 흔들림 없이 현재의 계획에 따라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며 고 박원순시장 재임하에 결정된 사항이며, 이에 따른 추진이라고 하지만 최종계획안에 대한 어떠한 공론과정도 없었다. 9월28일 발표된 내용 역시 제대로 된 기자간담회나 공개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보도자료 배포로 가름하는 등 공개적인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조성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의사 결정과 집행은 내년 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 시장의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8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0월에 착공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서울시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답을 해야만 한다.

김학진서울시행정부시장은 “변화되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빌딩 숲에서 도심 숲으로, 자연과 공존하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춘 생태문명도시로 본격적 전환을 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역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 그렇기에 상징성과 미래가치를 창출한 교통시스템 구축, 광장과 주변과의 조화, 민주적인 절차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조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내년 4월 시민들이 선출할 새 서울시장이 의사 결정과 집행을 행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 10월말 착공 예정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2020. 10. 2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23명 일동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123명 전문가 서명 명단>

강다연(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강제상(경희대 교수), 강철준(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고영희(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김근영(강남대학교 교수), 김낙웅(기술사사무소 한누리 대표기술사), 김남주(아름건축사 사무소), 김레베카(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김민수(프리랜서),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주(도시건축 이래 소장), 김성철(해마건축 전무), 김수미(숭실대 부교수), 김영기(정치교육연구원 운영위원), 김영섭((주)김영섭 건축문화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은희(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김종동(전)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활장지원센터장), 김종술(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주영(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지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김천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학영(대한건축사협회 회원), 김향숙(문화기획), 김현동(경실련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김현순(팍스크리스티코리아 이사), 김형곤((주)남경이앤씨 대표), 김형욱((주)정도유아이티 전무이사), 나태준(연세대학교 교수),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류중석(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맹기돈(도시연대 사무처장), 문병섭(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전략기획본부장), 문정석((주)빅바이스몰 대표), 박배균(서울대학교 교수), 박선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박준환(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원), 박지훈(중앙대학교 연구교수), 박창배(부산대학교 건축학과), 박철현(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박한별(자문자답 대표), 배인명(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배정환(서울대학교 교수), 백남철(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백승한(가톨릭관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백인길(대진대학교 교수), 서교리(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 서수민(Temple대 조교수), 서영복(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서정일(건축가), 소준철(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송하중(경희대 명예교수), 신건수(경남대 건축학부 조교수), 신민재(에이앤엘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신재은(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 신혜란(서울대학교 교수), 안현찬(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염신규((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염형철(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오성호(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오정은(에이코랩건축사사무소 대표), 우경국(예공아트스페이스 대표), 원보현(동국대학교 전임강사), 유혜연(숭실대학교 교수), 윤은주(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윤전우(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윤혜진(University of Wisconsin - Milwaukee, Associate Professor), 윤희성(사단법인 국제문화콘텐츠교류협회 이사장), 음성원(도시건축전문작가), 이건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위원), 이기향(건축사사무소 한아키텍트 이기향), 이다빈(작가), 이민원(광주대학교 교수), 이범훈(인천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중점교수), 이상현(한신대학교 교수), 이상협(인제대학교 교수), 이성진(인천골목문화지킴이 대표), 이양재(엘리펀츠건축사사무소), 이영범(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이영현((주)엠에이피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오주은(건축저널리스트), 이원제(상명대 교수), 이유미(주식회사 어반콜라보 대표), 이재석(사)한국정원협회 회장), 이진경(건축설계), 이진형(조경설계서안(주) 소장), 이채관(사)와우센타 대표), 이태영(건축사사무소 아이건축), 임민수(대학강사), 임영수(조경사무소 사람과 나무(주) 상무),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임채운(건축설계), 임희자(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장보혜(스튜디오 그린집 대표), 장옥연((주)온공간연구소 대표), 전민정(프리랜서), 정기황(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정수진(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정윤희(비평그룹 시각), 정혜영(티브움 이사장), 조성환(중앙대학교 교수), 조은경(한국교통안전공단), 조은미(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사무국장), 조재원(공일스튜디오건축사사무소 소장), 조현세((주)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주건일(서울YMCA 간사), 주경미(충남대 강사), 주신하(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최병성(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 소장), 최보연(상지대학교 조교수), 최봉문(목원대학교 교수), 최정환(공간문화센터 대표), 최창규(한양대학교 교수), 최하니(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수료), 최혁규(문화사회연구소), 하동익(서울대 연구원), 하장호(문화연대 집행위원), 해람(캐나다 요크대학교 부교수), 허경무(사단법인 한국서체연구회 이사장), 홍기원(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홍다솔(건축설계), 홍인옥(도시사회연구소 소장), 황평우(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추진 중단 요구 서명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들은 서명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써주셨습니다.

당장 중단하라는 의견부터 속도보다 다양한 논의과정들이 중요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성 등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의견들을 종합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교통대책에 대하여

“대도심 광역 철도망 GRT사업이 확정된 후(3-5년) 광화문역을 새로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와 연계하여 다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때까지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것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줄이는 길이다.”

2. 시민참여에 대하여

“시민참여라 함은 논의의 시작점과 초기단계에서 시민사회가 가치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행정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가치지향점을 정하고 이를 설득하는 절차로 형식화되었다는 점에서 본 계획안이 시민사회의 비전과 가치를 보여준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공론화 및 시민의견 공개 토의하겠다는 말뿐인 행정편의주의, 실적주의, 감감이 계획추진은 여기서 그만 두어야 합니다.”

“시민성을 상실한 이 계획의 강행을 반대합니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우선되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3.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여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임시적(temporary) 활용으로 효과를 검증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보행친화로나 광장화하기 전에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4. 공사 확정에 대하여

“공무원 일정에 맞춰 사업하는 일 그만합시다. 이제!”

“다음시장이 아닌, 다다음시장때부터, 청와대와 미대사관 이전과 함께 재연구를 시작합시다”

“10월 말 사업재개를 명령한 책임자를 명확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전근대적인 방법은 안됩니다. 시장유고인 상태에서 새로 선임될 시장이 하여야 합니다”

5. 속도조절과 방향 공유

“새로운 광화문광장 계획안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치뤄야 하는 큰 사업이라는 걸 생각할 때 더 신중하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봐야합니다.”

“전체를 다시 검토하고 공론에 부처라.”

“패러다임 변화가 충분히 크지 않아 보이는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은 반대한다. 10년-20년 뒤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 방향을 정확히 잡는 데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쓰길 바란다.”